

북·러 접근과 식량·농업 분야 협력

김영훈 |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연구위원 | kyhoon@krei.re.kr

I. 북·러 접근과 양국의 교류협력 수요

북한의 식량부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당면한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식량을 수입해야 하며 국내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국외로부터 식량과 자본을 들여오려면 북한은 개방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고립과 폐쇄는 더 심해졌다. 남·북, 북·미 관계가 냉각되었고,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했으며, 북한은 팬데믹에 대응해 3년간 국경을 봉쇄하기도 했다. 개방은커녕 고립 심화로 가중된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2020년대 들어 수구적이며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해 대응하기로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예상치 않은 돌파구가 등장했다. 2022년 초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어려운 국면에 처한 러시아는 일상적 관심국에 불과하던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2023년 7월 북한의 '전승절' 참석을 이유로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긴박한 전쟁 중임에도 김일성 생가를 견학하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동년 9월에는 푸틴이 극동의 변방 아무르주의 한 우주기지까지 날아와 김정은을 만났다. 올해 6월에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 재차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물론 회담 테이블 위에는 양국이 상대에게 요구할 당면 과제들이 놓여있었을 것이다.

굳이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당면한 대북 관심사는 무기와 탄약 공급이다. 북한의 대러 관심사는 좀 더 다채롭다. 미사일이나 위성과 관련된 우주항공 기술 습득, 노동자

러시아 파견, 석유 확보, 식량·농업 분야의 교류협력 등이 북한의 관심사로 드러나 있다. 6월의 평양 북·러 정상회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맺는 조약 체결로 그 성과를 알렸지만, 이면의 협상에서는 양국의 당면 관심사에서 각자 필요한 과실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 북한이 원하던 식량·농업 분야의 교류협력은 정상회담 전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II. 식량·농업 분야의 교류협력

식량 및 농업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협력 방향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양측의 필요와 조건을 고려할 때 곡물 도입, 밀 종자 제공과 재배기술 교류, 극동 러시아 농업개발 협력 등 세 방향의 교류협력이 논의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매년 식량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해외에서 식량을 마음껏 수입할 수 있다면 좋은 텐데 외화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늘 싼 값이나 무상으로 식량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 이 상황에서 전쟁에 따른 수출 장애로 4천만 톤의 곡물 재고를 안고 있는 러시아가 교류와 협력을 구하며 접근해 왔다. 북한으로서는 마땅히 환영했을 것이며 유리한 조건으로 식량 도입을 꾀했을 만하다. 전쟁 후 러시아가 모든 교역통제를 폐쇄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과거와 달리 작년부터 러시아산 곡물이 북한으로 대량 수송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올해 2월 한국의 국방 장관은 “러시아는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 작년 7~8월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컨테이너는 약 9천개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4. 2. 27).

한편, 2020년대 들어 북한 농업 당국은 밀 생산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밀 재배 독려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수준에서 옥수수 생산과 소비를 대체하자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만큼 북한에서 밀 종자와 재배 기술 확보는 내각과 당이 주도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러시아로서도 밀 재배에 관한 대북지원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마침 이 협력에 대한 양국의 논의는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의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밀 재배와 수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4. 4. 29).

북한과 러시아의 농업협력 논의는 지역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러시아 연해주 지사와 북한 농업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며 농업협력을 논의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러시아 지방정부가 협력 주체인 만큼 이 농업협력은 극동지역의 큰 숙제인 대규모 농장의 재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투자 부진으로 생산성이 낮아진 극동지역 농장의 회생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때 우리도 극동 러시아 농업개발 투자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일부 기업과 NGO가 직접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참여한다면 그 농업협력은 한국식 개발 투자가 아니라 중국식의 농업노동력 이주나 파견 형태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은 자본 부족으로 해외 농업개발 투자 여력이 없지만 국외로 파견할 수 있는 노동력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전망

최근 러시아는 대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 역시 러시아를 통해 부족한 것을 메우려 할 것이다. 북한의 가장 큰 당면 문제는 식량부족이다. 북한은 현 상황을 활용해 모자라는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구할 수 있겠지만 이에 그친다면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은 식량 도입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논의가 거기까지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밀 종자와 재배 기술 교류는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는 특별한 부담이 없다. 따라서 이 협력사업은 큰 장애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농업협력은 북한의 밀 생산과 공급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이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북한의 전체 식량 공급에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의 식량 생산에서 맥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극동 러시아 농업개발 협력은 양국의 관심과 달리 장래성이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먼저 국제사회가 이 협력을 반기지 않을 것 같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국제사회의 주요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노동력에 대한 북한 특유의 집단적 관리와 통제가 농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러시아 대농장에서 노동 투입은 매우 조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에도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노동력 유입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이 농업협력은 시작되더라도 일정한 한계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들 문제점은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과정에서 점차 드러나 구체화 될 것이다. 식량·농업 분야 협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추진 의지가 우선 중요하겠지만, 기대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향후 관심을 두고 지켜볼 부분이다.